

# 글로벌 방송통신 동향 리포트

제1호 (2010. 5. 7)

작 성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협력실 국제협력기획팀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 대동빌딩

<http://www.kisa.or.kr> <http://conex.kisa.or.kr>

## I. 방송통신 시장 동향

1. 남아공 모바일 TV 시장 현황

## II. 방송통신 규제 및 정책 동향

1. 美 FCC의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 추진을 위한 첫 관문... '망중립성 논란 해결'
2. 英 Ofcom의 BSkyB 프리미엄 TV 채널 독점권 방지를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
3. 중국 정부, 정치적 목적의 해외 인터넷 검열 강화

# I 방송통신 시장 동향

## 1. 남아공 모바일 TV 시장 현황

### □ DVB-H 방식 서비스 테스트 현황

- 남아공의 모바일 TV 시장은 위성TV 사업자 MultiChoice가 현지 이동사 Vodacom과 공동으로 지난 DVB-H 방식의 테스트 서비스를 지난 2006년 출시하면서 태동하기 시작
  - MultiChoice는 케냐, 나이지리아, 가나 등에 이미 모바일 TV 서비스를 출시한 경험을 갖고 있고, 남아공 현지 테스트에는 기존 유료 TV 콘텐츠 일부를 동원하고 있으며, Vodacom의 경쟁 이동사인 MTN 역시 DVB-H 기반 모바일 TV 서비스로 본격 경쟁을 예고

[표] 남아공 모바일 TV 시장 진행 현황

연도	내용
2005년 12월	Vodacom이 Multichoice와 함께 DVB-H 테스트 서비스를 개시함
2006년 10월	MTN이 삼성의 P910 단말을 판매 개시하며 Multichoice와 함께 3G 방식의 DVB-H 모바일 TV 방송을 테스트 서비스함
2007년	남아공 정부가 DVB-H를 모바일 TV의 표준으로 채택
2009년 초	MTN과 Multichoice가 모바일 TV 사업 개시 의사를 밝힘
2009년 2월	규제기관인 ICASA가 모바일 TV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지원사 모집을 일시적으로 중단, 모바일 TV 개시가 늦춰짐
2010년 3월	남아공 월드컵 개막예정, 규제기관인 ICASA는 서비스 운영사와 협의를 벌이며 Mobile-TV License 발급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출처: 스트라베이스

## □ 월드컵 특수를 노린 ICASA, 모바일 TV 라이선스 발급 계획 적극 추진 중

◦남아공 방송통신규제당국 ICASA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콘텐츠의 모바일 TV 전송에 관한 라이선스를 늦어도 6월 말까지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Vodacom, MTN 등 관련 업체들의 입찰이 거의 확실한 상황

- 남아공 정부는 2007년 DVB-H를 모바일 TV 표준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해당 라이선스는 당초 작년 말 발급 예정이었으나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 미완료에 따른 주파수 할당 문제를 이유로 거듭 연기

- 남아공의 통신사업자인 Vodacom, MTN, Multichoice는 2005년부터 모바일 TV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나 사업자 선정이 지지부진해 아직까지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음

◦월드컵 관련 모바일 TV 라이선스는 ‘멀티플렉스(multiplex: 하나의 주파수로 최대 12개의 채널을 수용)’ 방식으로 할당되며, 단일 사업자의 멀티플렉스 점유율은 60% 이내로 한정

◦모바일 TV 시장에 할당할 두 번째 멀티플렉스 라이선스는 향후 실시될 2차 유료 TV 라이선스 발급 때 함께 다루어질 예정이며, 관련 수요 조사는 ICASA 주관으로 2011년에 실시될 예정

[Information Tip]

◆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동통신 시장 현황

▷ 남아공의 이동통신 시장은 Vodacom과 MTN이 GSM 기술로 1994년 상용 서비스에 나선 이래 급성장을 거듭해 오늘날에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돌파했음

- 유선전화 인프라가 부족하고 요금도 비싼 남아공의 통신환경이 이동통신 부문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
- 남아공의 세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 Cell C는 2001년 2월에 GSM 사업권 (1800MHz)을 발급 받아 같은 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했고 현재 Vodacom과 로밍 제휴를 맺은 상태
- 2008년 12월에는 남아공 최대 통신사업자 Telkom이 3G 네트워크를 상용화해 사실상 네 번째 이동사가 됐음
- MVNO 사업자 Virgin Mobile은 2006년 남아공에 진출해 지방 시장의 군소 사업자들과도 제휴를 맺었으나 아직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표] 남아공 이동시장 통계

이동통신 누적 가입자 규모	5,600만 명
年 성장률	6%
이동통신 보급률	113%
주요 이동사	Vodacom, MTN, Cell C

출처: Paul Budde Communication

□ DVB-H 방식만으로 모바일 TV 본격 확산은 쉽지 않을 듯

- 남아공월드컵 특수를 감안하더라도 DVB-H 방식만으로는 모바일 TV의 본격 확산이 어려울 수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예상
- DVB-H는 지원 단말 기종이 매우 적고 가격도 비싼 편이어서 남아공의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 실제로 DVB-H는 본토 시장인 유럽에서도 단말 라인업 문제와 비즈니스 측면의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음
- ICASA 측이 월드컵 관련 사업권자 선정과 관련해 ‘특정 기술에 편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것도 DVB-H만으로는 시장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

## □ 신규 모바일 TV 사업자들의 반발로 입찰 지연 가능성도 대두

- 일부 모바일 TV 사업자들은 무리한 ICASA의 모바일 TV 라이선스 입찰 추진 일정에 법적 대응 불사 방침을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최근 Mobile TV Consortium은 ICASA 위원장 Paris Mashile에게 모바일 TV 라이선스 입찰 내용이 공시된 지 3주 만에 ICASA가 요구하는 입찰 사업자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며 항의하는 서안을 발송
- 특히 Mobile TV Consortium은 이번 모바일 TV 라이선스 입찰 조건이 기존의 TV Broadcast 서비스 라이선스 보유사업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처사이자 헌법상의 공정경쟁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
- Mobile TV Consortium의 Mothobi Mutloatse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모바일 TV 라이선스 입찰이 연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

- 이로 인해 6월 월드컵 개최에 맞춰 모바일 TV 라이선스를 교부해야 하는 ICASA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Information Tip]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 남아공의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조직 개요

- 남아공은 방송과 전기통신의 양 분야를 ‘일렉트로닉스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일괄하되, 정책 수립은 통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가 맡고 각종 규제는 독립기관 ICASA(In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South Africa)가 총괄하는 기능적 분리를 택하고 있음

▷ 정책기관: 통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 남아공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은 주무부서인 통신부 (Department of Communications)가 전담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당국인 ICASA가 자문 형식으로 프로세스에 참여

[표] 남아공 통신부의 방송통신 정책 추진 목표

No	방송통신 정책 추진 목표
1)	시대적 니즈에 부응하는 ICT 정책 수립으로 남아공 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2)	이용하기 저렴하고 신뢰성 높은 ICT 인프라 확산을 유도해 남아공 국민 사이의 정보격차 해소
3)	ICASA 강화를 통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여 공익 실현과 업계 발전에 기여
4)	정부 소유 기업에 대한 감독
5)	국제사회에서 남아공의 ICT 위상 제고

출처: DOC

▷ 규제기관: ICASA(In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South Africa)

- 독립규제기관인 ICASA는 기술간 융합의 흐름을 반영한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근거(ICASA Act of 2000)로 종전의 통신규제당국인 SATRA와 방송규제당국 IBA가 합병되면서 2000년 7월 정식 출범했고 현재 우편 서비스까지 규제 영역에 포괄하고 있음
- ICASA는 방송과 통신서비스 부문의 사업요건을 설정하고 주파수 운용과 사업권 발급을 담당하는 등 규제 영역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함
- 단, ICASA는 기간망 사업자 Telkom의 지분 매각 등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를 앞세웠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남아공 정부에서도 이런 지적을 수용해 ICASA에 대한 조직개편을 고려하고 있음

## 참고자료

1. 'Mobile TV becomes a reality in South Africa', gemalto.com, 2010.4.14.
2. 'Icasa Legal Threat Risks Mobile TV Promise to Fifa', allafrika.com, 2010.4.26
3. 'FIFA World Cup to boost mobile TV in Africa', Reuters, 2009.8.5
4. 'MTN Mobile TV on its way', mybroadband.co.za, 2009.9.8
5. 'Icasa moves on mobile TV licences', techcentral.co.za, 2010.4.15



## II 방송통신 정책 동향

### 1. 美 FCC의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BP) 추진을 위한 첫 관문...‘망중립성 논란 해결’

- 지난 4월 6일 美 연방재판소가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는 망중립성 규제를 사업자에게 강제할 만한 법적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FCC의 망중립성 규제 도입에 빨간 불이 켜짐
  - 美 콜롬비아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2008년 8월 가입자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BitTorrent 등의 P2P 사업자들의 트래픽 속도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美 케이블 사업자 Comcast에 2008년 8월 FCC가 내린 시정명령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함
- 이에 FCC는 지난 4월 8일 마감 예정이던 망중립성(net neutrality)규제 도입에 대한 여론 수렴기간을 4월 26일로 연장하는 등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망 중립성 규제 도입문제는 향후 수많은 분쟁요소가 얽혀 있는 美 국가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 이하 NBP)를 주도해 나가야할 FCC의 역량을 가늠하는 첫 실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NBP 플랜은 ‘미국의 모든 소비자에게 빠르고 저렴한 브로드밴드 회선을

제공하고 단말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교육, 의료, 에너지, 기업, 공공서비스, 국가안보 등 여러 영역의 고른 발전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임

- 유선 브로드밴드에 대한 FCC의 규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민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 보편서비스기금(USF: Universal Service Fund)에서 향후 10년간 최대 155억 달러의 자금을 브로드밴드용으로 전환'하기로 한 NBP 플랜은 아예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며 의료기록, 전력이용량, 행정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원격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접근성과 보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 역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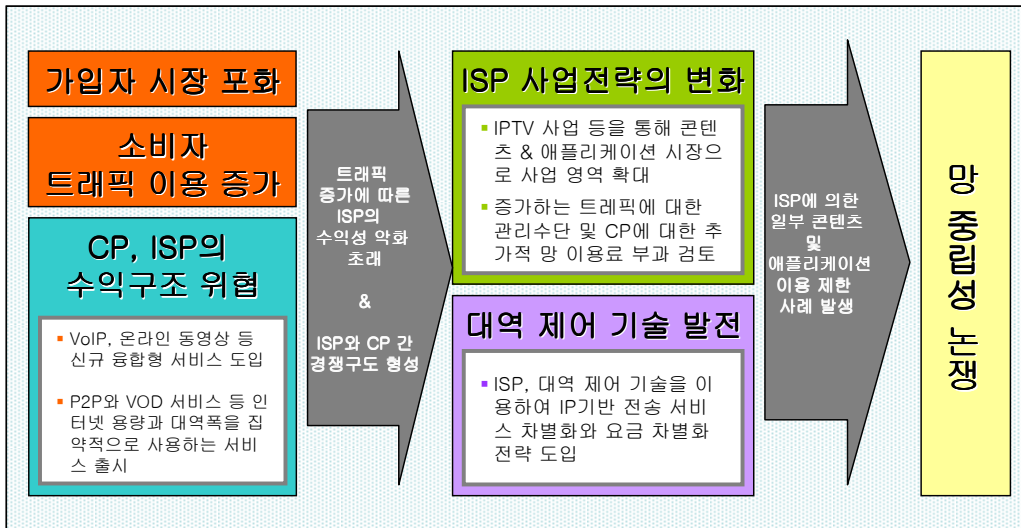
## □ FCC, 망 중립성 규제 도입 과정

### ▶ 망 중립성 규제 도입 논쟁의 배경

- 망 중립성 도입에 관한 논쟁은 대역 제어 기술과 같은 네트워크 이용 제약 기술을 확보하게 된 ISP가 VoIP, 동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ISP의 최대경쟁자로 부상한 CP를 견제하면서 야기됨
  - ISP와는 공생관계에 있던 CP들이 초고속 인터넷 브로드밴드 보급 확대로 동영상 서비스나 P2P 등 다양한 고용량 서비스 제공을 통해 ISP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VoIP 사업에 진출하는 등 통신사업자의 수익 구조를 위협하는 경쟁사업자로 급부상함
  - ISP는 자사 수익확보를 위해 ▲IPTV 사업 등과 같은 콘텐츠 시장으로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대역제어 기술을 이용한

IP 기반 전송 서비스 차별화와 요금차별화 전략 시도, 그리고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한 관리 수단 및 CP에 대한 추가적 망 이용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에 이룸

[그림] 망중립성 논쟁의 배경



출처: 스트라베이스

- 미국에서 망 중립성 이슈화의 계기가 된 것은 2005년 발생한 Madison River 사건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지역 유선통신사업자(ILEC) Madison River Communications가 자사의 가입자들에게 타사의 VoIP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VoIP 트래픽을 차단한 것이 발단이 됨
- o 과거 망 중립성 논의는 ISP와 CP 간의 유선 인터넷 트래픽, 사업자 차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모바일 브로드밴드 이용자 급증 등으로 이 같은 논쟁의 범위가 유선 브로드밴드를 벗어나 모바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난 2009년 7월 28일 Apple이 Google Voice 애플리케이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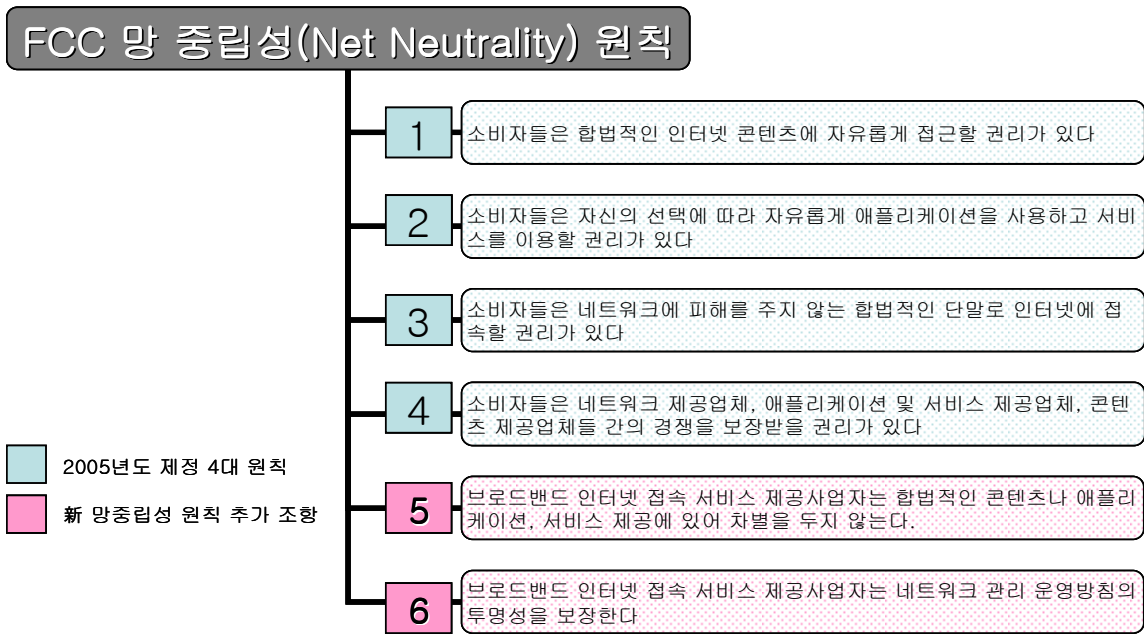
App Store 심사에서 탈락시키자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망 중립성 문제가 일약 언론의 주목을 받음

- FCC는 논란의 당사자인 Apple과 Google은 물론 AT&T까지 Google Voice 애플리케이션의 App Store 등록심사 과정에 관한 질문서를 발송하였고 최종적으로 AT&T는 이 사건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으나 이를 계기로 모바일 브로드밴드에서도 망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표면화

▶ FCC, 망 중립성 규제 도입 추진 과정

- 美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05년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2005년도 정책 성명서에 FCC 망중립성 4대 가이드라인을 명시
  - FCC의 2005년도 정책 성명서에는 소비자가 ①자신이 선택한 합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②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선택한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③망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고, ④망사업자들,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업자들, 그리고 콘텐츠 사업자들간의 경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

[그림] FCC의 망 중립성 6대 원칙



출처: CNet.com

- 망중립성 지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기존 정책 성명서에서 제시한 네 가지 원칙에 이를 보완하는 비차별성 (nondiscrimination)과 투명성 (transparency), 두 가지 원칙을 추가하여 법제화하고 이를 무선 플랫폼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을 주요 골자로 하는 ‘Open Internet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가 2009년 10월 발표
- Genachowski 위원장은 2009년 9월 21일 Washington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인터넷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기회 제공에 있어 훌륭한 플랫폼으로써 기업가들의 잠재성을 일깨워 주고, 중소기업들의 출현 및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환경을 지키는 것은 향후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vital)인 것"이라며 망 중립성 규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

[Information Tip]

◆ Julius Genachowski FCC 위원장 프로필



- ▷ 출생연도: 1962년 8월 19일 미국 New York 출생
- ▷ 학력: Columbia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졸업
- ▷ 주요 경력
  - 미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위원장 (2009.06~현재)
  - 버락 오바마 대선 선거운동본부에서 기술, 미디어, 통신 정책 기획부문의 고문 담당
  - 디지털 미디어 기업 Rock Creek Ventures, LaunchBox Digital 등의 기업을 설립
  - 클린턴 행정부 당시 리드 헌트 FCC 위원장의 수석 보좌관
  - IAC(Inter Active Corp.) 이사

- FCC는 지난 2009년 10월 22일 무기명투표에서 통신사업자들이 수익성에 의거해 특정 콘텐츠를 임의로 차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법안 제정을 만장일치로 의결

□ FCC 패소에 대한 각 사업자들의 입장

- ▶ AT&T, Verizon, Comcast 등 ISP 사업자들, 연방법원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
- 美 최대 케이블사업자인 Comcast는 이번 판결에 만족하며, 추후 해적판 영화콘텐츠나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의 대용량 파일을 교환하는 BitTorrent 등의 서비스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리 정책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 Google, Warner Bros., Skype 등의 CP와 이용자들, 우려 표명

- 유저들은 Comcast가 케이블서비스와 관련해 경쟁업체인 CBS가 소유한 케이블 채널은 제한하는 대신, NBC 채널 전송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행위와 유사하게 인터넷서비스에서도 잠재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비영리단체인 'Free Press'의 Ben Scott 정책 담당자는 "인터넷 유저들에게는 담당구역 경찰관이 없어졌다"고 말함
- CP들은 ISP들이 HD 동영상과 같이 과도한 트래픽을 차지하는 콘텐츠 전송에 대한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것이라며 우려함
  - Google은 이번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했으나, 동사가 참여하고 있는 오픈인터넷연합(OIC, Open Internet Coalition)의 Markham Erickson 담당자는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들에게 인터넷의 개방성과 활력을 저당잡힌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전함

## □ FCC, 망 중립성 규제 도입에 관한 향후 전망

### ▶ FCC, 여전히 망 중립성 규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FCC의 Julius Genachowski 위원장은 Comcast와의 소송건에서 패소한다면, 인터넷서비스에서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법적 권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 FCC는 법원이 부정한 것이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한 ‘방법적 타당성’이지 브로드밴드 시장에 대한 FCC의 규제권이나 망중립성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여전히 개방형 인터넷 환경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함

-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등 주요 언론들은 이번 연방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FCC에 internet provider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FCC의 전직 총괄고문변호사인 Sam Feder는 “이번 법원 판결은 'FCC에게는 최악의 결과’라고 단언하며 물론 FCC가 다른 방식으로 본래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도 충분하겠지만, FCC에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국회의 움직임을 고무시키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 통신영역 내 주요 플레이어들이 수궁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이 관건

- 콜롬비아 대학 경영대학원의 금융·경제학과 교수겸 통신정보 연구소장인 Eli M. Noam 교수는 이번 판결이 FCC의 규제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법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FCC가 통신영역 내 주요 플레이어들의 합법성 여부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이들이 수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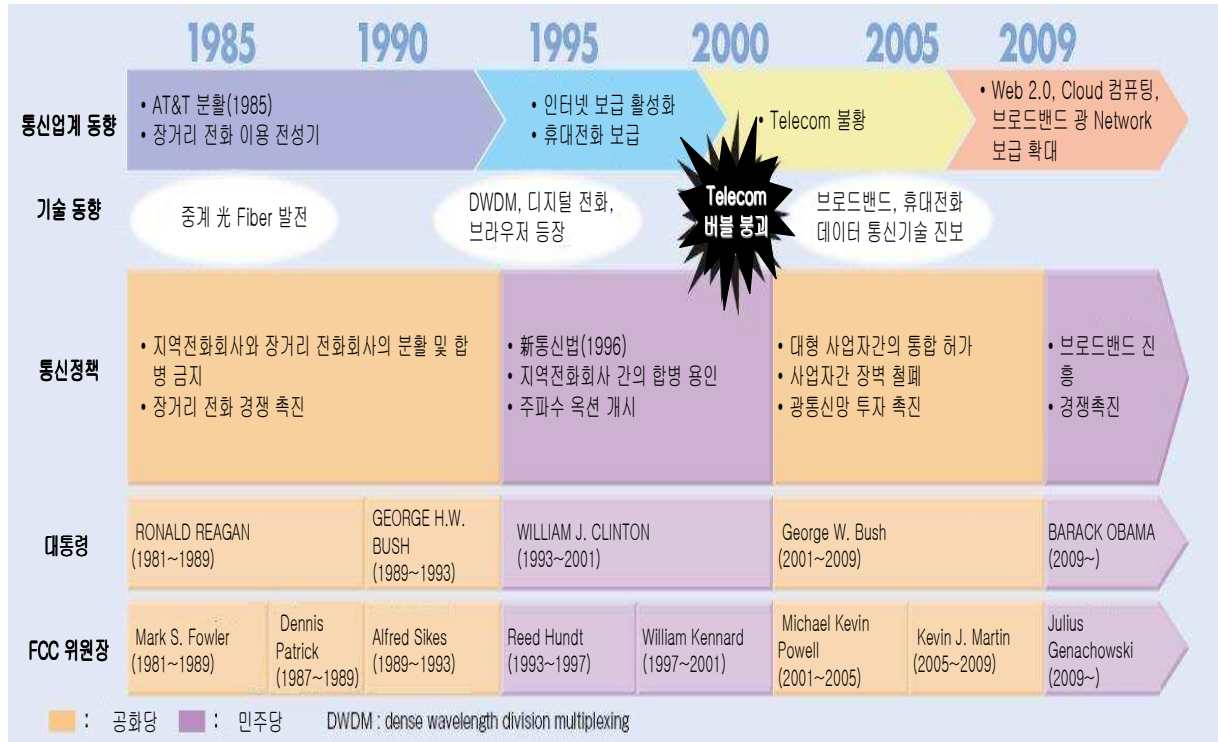
▶ 망 중립성 규제 도입에 따른 시장 변화에도 주목

- 한편 NBP나 망중립성 규제 도입은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변수로 기능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Verizon Wireless가 Skype의 Mobile VoIP 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은 NBP의 전제 중 하나인 망 개방에 앞서 회사 스스로가 ‘모양새’를 챙긴 것으로 풀이됨
  - Verizon Wireless는 어차피 FCC의 압박이 가중될 것이 자명한 이상,



이왕이면 자발적으로 경쟁 서비스를 수용하는 게 사업적으로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그림]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미국 통신 정책의 변화



출처: Nikkei Communications

- 미국 방송사들이 자체 모바일 TV 표준인 ATSC-H/M으로 여유 주파수의 재활용에 나서고 있는 것 역시 향후의 규제 변수를 감안한 포석
- FCC가 NBP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할당할 500MHz 분량의 신규 주파수 중 1/3 가량이 기존 방송용 주파수에서 충당될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현재 보유한 주파수의 ‘활용처’를 확보해 방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임

참고자료

1. 'Does Obama Want to Control the Internet?', Foxnews, 2009.9.24
2. 'FCC Begins Drafting Rules on Network Neutrality', New York Times, 2009.10.22
3. 'FCC Chair to Wireless Industry: More Spectrum Coming...and Net Neutrality Rules', Washingtonpost.com, 2009.10.7
4. 'FCC begins rollout of national broadband policies', Washington Post, 2010.3.31.
5. 'House Lawmakers Praise, Question FCC's Broadband Plan', Broadband Breakfast 2010.3.26.
6. 'FCC needs Congress' help on broadband effort', Los Angeles Times, 2010.3.17.
7. 'FCC Broadband Plan Faces Challenges', Information Week, 2010.3.17.
8. 'Connecting America: The National Broadband Plan', FCC, 2010.3.
9. 'U.S. Court Curbs F.C.C. Authority on Web Traffic', New York Times, 201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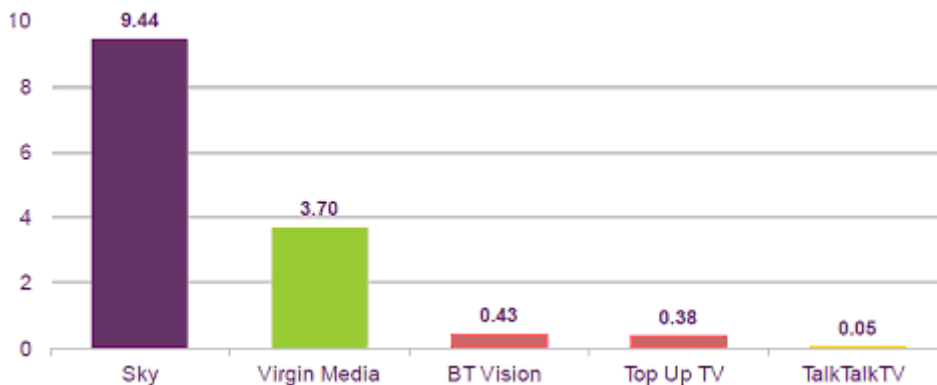
2. 英 Ofcom의 BSkyB 프리미엄 TV 채널  
독점권 방지를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

□ Ofcom, 시장장악력 남용하는 BSkyB에 대한 채널 도매 규제안 발표

- 英 방송통신 규제기관 Ofcom은 British Sky Broadcast가 프리미엄 채널의 도매 공급에 있어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 경쟁 관계에 있는 유료 TV 사업자로부터 불합리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Sky의 스포츠 채널에 대한 도매 규제안을 발표했음

[그림] 영국 다채널 방송 사업자 가입자 수

(단위: 백만 명)



출처: Ofcom

- Sky가 타 방송사에 프리미엄 콘텐츠 제공을 제한하고, 과도한 채널 도매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이 감소하고 경쟁 방송사의 투자 및 혁신 의지가 경감되는 부작용 초래
- Ofcom은 규제안에 따라 Sky에 6주 내로 경쟁 TV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

[Information Tip]

◆ Ofcom의 규제안 개요

- ▷ Sky의 프리미엄 스포츠 콘텐츠 도매 제공 규제
  - Sky Sports 1, 2의 채널 도매 가격을 Ofcom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인하
  - Sky Sports 1, 2를 타 방송사에 의무적으로 제공
  
- ▷ 디지털 지상파를 통한 유료 TV 서비스 조건부 승인
  - Sky가 준비 중인 디지털 지상파 TV 영화 콘텐츠 서비스 'Picnic'에 대해, Sky Sports 1, 2를 타 TV 채널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할 경우에 한해 조건부 승인
  - 'Picnic'의 영화 채널을 Sky 외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 견지
  
- ▷ 이상의 결정 사항을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로 회부
  - Ofcom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기 전, 경쟁위원회의 경쟁 평가를 거칠 예정 (5월 15일 결과 발표)

□ Ofcom의 규제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 Ofcom의 결정은 Sky의 사업을 도매와 소매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Sky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
  
- Sky는 아직 도매 사업에 해당하는 콘텐츠 소싱 및 채널 판매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소매 부문에서 가입자가 이탈하더라도 도매 채널의 유료 가입자 확보를 통해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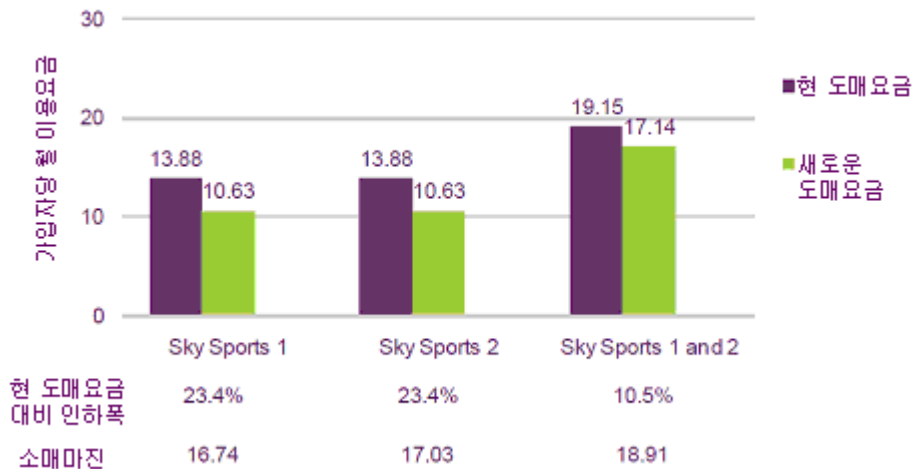
[표] 방송 value chain 상에서 英 TV사업자의 시장 포지션

주요 정책	콘텐츠 제작	도매채널	도매 플랫폼 서비스	소매 서비스
BT Vision			○	○
Discovery	○	○		
Disney	○	○		
MUTV	○	○		
Sky	○	○	○	○
TopUp TV			○	○
Vlrgin	○	○	○	○

출처: Ofcom

- Ofcom이 제시한 도매 가격 인하폭이 예상보다 작으며, Sky Sports의 HD 채널이나 Sky Movies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는 점도 Sky에게 유리함

[그림] Ofcom이 지시한 Sky Sports 채널의 도매 가격



출처: Ofcom

- Ofcom은 Sky Sports HD 채널에 대해서는 도매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안을 내놓는 대신, Sky가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매 가격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음

□ Sky의 법적 대응, 경쟁항소특별법원(Competition Appeal Tribunal)에 문제제기

- Sky는 Ofcom의 결정에 반발하며 경쟁항소특별법원에 소송을 제기, Ofcom의 규제안의 법정 타당성을 물었음
  - Sky의 Jeremy Darroch 사장은 법률 위반이나 소비자 권리 침해와 관련한 명확한 증거 없이 규제기관에 의한 서비스 요금 제한은 자유 경쟁 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Ofcom을 비난
  - Darroch 사장은 또 Ofcom의 결정으로 BT, Virgin Media, Top Up TV 등이 Sky Sports 채널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오히려 MTV, Discovery, National Geographic 등 타 TV 채널이 상대적으로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
- Sky의 법적 대응은 다음 프리미어 리그 시즌까지 Ofcom의 권고 사항을 유예시키기 위한 것
  - 사실상 Ofcom의 규제안이 시행되더라도 Sky가 타 방송사와 계약을 수정하고 채널 전송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0~2011년 프리미어 리그는 VT, Virgin Media 등 경쟁 방송사에서 제공되기 어려울 전망

□ 스포츠 콘텐츠 저작권자, 경쟁 TV 방송사, 소비자 단체의 반응

- 프리미어 리그, 럭비풋볼협회 등 스포츠 콘텐츠 저작권자는 방송사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에 부정적인 반응
  - Sky에 대한 제재로 인해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방송사의 구매 의지가 위축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스포츠의 콘텐츠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
- BT, Virgin Media 등 Sky의 경쟁 방송사는 제재 수위가 너무

## 낮다는 비판

- Ofcom의 의무적 채널 도매 제공 사항에 Sky의 영화 채널이 빠졌으며, 스포츠 채널 역시 Sky의 모든 채널이 포함되었어야 했다고 주장
- 일반 소비자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 英 소비자 단체 Consumer Focus는 Ofcom의 규제안이 TV 사업자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증진과 요금 부담 경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Analytic View

#### ◆ Ofcom의 British Sky Broadcast에 대한 프리미엄 채널 도매 가격 규제안

- Sky가 시장장악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 도매 가격 인하와 대표 프리미엄 스포츠 채널인 Sky Sports 1, 2의 타 방송 채널 의무 제공 지시
- 그러나 여전히 채널 도매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Sky가 가입자 이탈 면에서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며, 도매 가격 인하폭 역시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
- 경쟁 방송사, 스포츠 저작권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Sky의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음

## 참고자료

1. 'BSkyB chief says smaller channels will suffer from Ofcom pay TV ruling', Guardian, 2010.4.14.
2. 'BSkyB Must Offer Sport Channels to Rivals, Ofcom Says', Business Week, 2010.3.31
3. 'Consumers are big winners in BskyB ruling', Financial Times, 2010.3.31.
4. 'Delivering consumer benefits in pay TV', Ofcom, 2010.3.31.
5. 'Ofcom concludes its third review of the pay TV market', Lexology, 2010.4.21

6. 'Ofcom's BSkyB ruling may be more favourable than feared', Telegraph, 2010.3.31.
7. 'Ofcom versus Sky: a score draw, but remedy goes to appeal, Ovum, 2010.4.8.
8. 'Premier League in Ofcom challenge', BBC, 2010.4.15.



## 2. 중국 정부, 정치적 목적의 해외 인터넷 검열 강화

- 중국 정부는 2010년 5월 3일 ‘해외 적대 세력’이 자국 내에 유해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
  - 중국 정부 측은 이번 조치가 해외 음란 사이트, 도박 및 사기 등 범죄 사이트에 대한 단속 강화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명확한 검열 대상은 미공개
  - 기존에 중국은 자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확산시키는 정치적 민감 사안, 인권 활동, 티벳 독립 관련 정보 및 기타 공산주의 룰에 위배되는 해외 사이트와 네티즌들의 활동을 차단해옴
  - 중국 정부가 일부 해외 뉴스 사이트의 접속도 제한해온 가운데, 이번 검열 강화의 대상이 되는 ‘해외 적대 세력’에는 정치적 유해 사이트 제약이 중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중국 정부의 최근 인터넷 검열 내역

시점	내용
2010.1	• 중국 대형 검색엔진 바이두(Baidu.com) 검색에서 구글 블로그 차단
2009.6	• 중국 신장 지역 폭동 발생 후 인터넷 차단
2009.6	• 중국 천안문 사태 기념일 전 Twitter, Hotmail, Flickr 및 일부 웹 서비스 사이트 차단
2009.3	• 구글, 내부적으로 중국 내 유튜브 사이트 차단 허용
2009.1	• 바이두 사이트 내 사전 검열 단어 리스트 중 13개의 정치적 검열 단어 발견 예) 중국공산당, 독재정권, 반혁명주의적 활동, 인권과 그에 대한 주장, 천안문 광장 대학살, 파룬궁, 소수 민족 관련, 군사 기밀, 장기적출

출처: Opennet.net, Infides 재구성

- 중국 정부는 자유로운 정보 공유 및 확산이 가능한 인터넷의 보급 증가와 더불어 ‘국가 정서 유해 정보’를 이유로 자국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어 국제적인 반발과 우려를 사고 있음
-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및 교육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3월 말 기준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세계 최대인 약 4억 400만 명으로 집계
- 이중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구도 2억 3,300만 명에 달하며 인터넷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 및 보급률 추이

연도	이용자	인구수	보급률
2000	22,500,000	1,288,307,100	1.7 %
2001	33,700,000	1,288,307,100	2.6 %
2002	59,100,000	1,288,307,100	4.6 %
2003	69,000,000	1,288,307,100	5.4 %
2004	94,000,000	1,288,307,100	7.3 %
2005	103,000,000	1,289,664,808	7.9 %
2006	137,000,000	1,317,431,495	10.4 %
2007	162,000,000	1,317,431,495	12.3 %
2008	253,000,000	1,330,044,605	19.0 %
2009	384,000,000	1,338,612,968	28.7 %

출처: CNNIC, 2010.2

- 그러나 중국 정부는 금지 단어의 검색을 제한하고, 특정 용어가 들어간 글이나 영상을 차단하는 웹 모니터링 및 광범위한 검열 시스템인 'Golden Shield Project(金盾工程)'을 운영하며 정보를 통제하고 있어 인터넷 만리장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2009년 중국 정부는 해외 PC 업체들에게 중국 업체가 만든 '그린 댐(Green Dam)'이라는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라고 요구하기도 함
- 이는 청소년들의 음란 사이트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온라인 사이트를 정부의 의도대로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킴

[그림] 중국 PC에 의무 설치되는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 '그린 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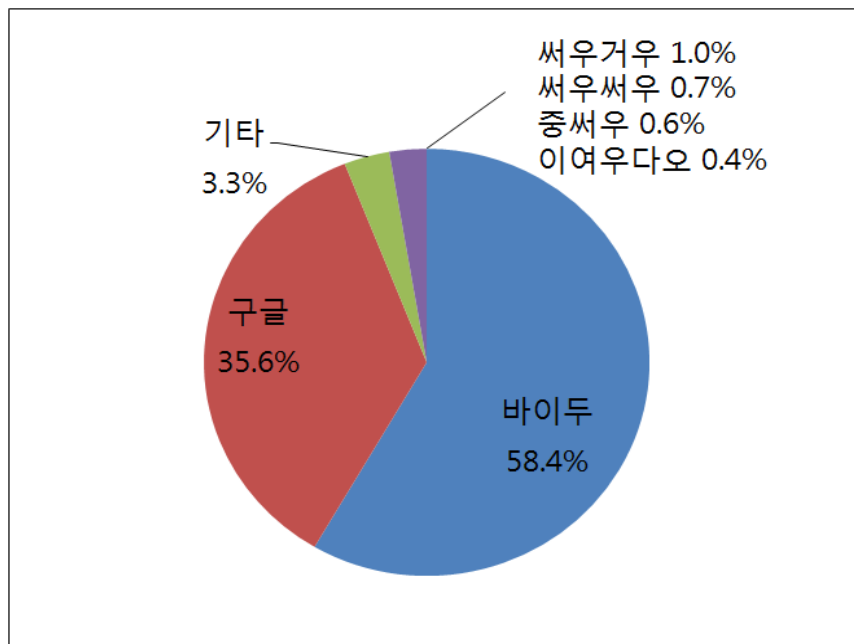


출처: IT.ICXO.COM, 2009.6

- 중국 정부는 2010년 들어 온라인 관련 규제법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중국 내 언론 및 정보 자유 탄압에 대한 해외 정부와 기업들의 우려와 논란, 충돌까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임
- 2010년 2월 중국 정부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규제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의무화, 신원 증명 서류와 사진 제출 의무화 방침을 발표함
- 중국 정부는 포르노 콘텐츠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의 인터넷 도메인 등록 및 사용에 대한 추가 규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언론계와 이용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짐

- 2010년 4월 27일에는 인터넷은 물론 통신 등 공공정보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해 국가기밀 누설 조사에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국가기밀법을 개정하여 중국의 인터넷 자유가 더욱 압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짐
- 이러한 중국 정부의 검열 강화 및 정보에 대한 자유 탄압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 확산은 글로벌 검색 엔진 구글과의 충돌로 인해 가속화됨
- 구글은 중국 정부와의 검열 마찰로 인해 2010년 3월 말 결국 중국에서 검색 엔진 사업을 철수하고, 이를 홍콩으로 이전시킴 ([www.google.com.cn](http://www.google.com.cn)에 접속할 경우 [www.google.com.hk](http://www.google.com.hk)으로 자동연결)

[그림] 중국 인터넷 검색 시장 업체별 점유율



출처: 中 이관귀지, 2009.4Q

[Information Tip]

◆ **중국 정부와 구글의 인터넷 검열 충돌과 구글의 중국 철수**

- ▷ 2006년 말 구글의 중국 시장 진출
- ▷ 2009년 12월 구글 네트워크가 중국 내부에서 해킹당하고 현지 인권운동가의 G메일 계정이 침투되자 검열 폐지를 주장
- ▷ 2010년 3월 23일 검열 거부 논란 심화로 검열 없는 홍콩으로 사이트 이전
- ▷ 2010년 3월 30일 중국 정부는 자체 검열 사이트에서 중국 본토 내 구글 모바일 검색 및 google.com.hk 접속을 차단하는 등 보복적 조치 단행
- ▷ 2010년 3월 30일 중국 주요 통신사 시나닷컴, 톰그룹,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도 구글 검색 서비스 제외

◆ **구글의 중국 철수에 따른 의의와 여파**

- ▷ 同 사건으로 중국의 언론 통제 등 인권 탄압 실태가 노출되면서 국제적 비난 확대
- ▷ 구글의 중국 시장 매출은 전체 매출의 1~2%(2억 5,000만~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해, 이번 조치는 구글이 작은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 당국의 검열에 맞서 ‘인터넷 자유’라는 명분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분석
- ▷ 구글은 중국 지사의 연구개발 및 광고마케팅 분야는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가 남아있는 구글 사업부를 폐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 ▷ 홍콩에서는 향후 중국이 홍콩의 언론 자유도 제한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

- 국제 언론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를 비롯한 국제 시장에서 중국 정부의 온라인 내 정치적 지배 강화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음
- 이번 검열 강화는 구글과의 충돌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중국 내 네티즌들의 권리 주장 및 국제 사회에서 중국 네티즌에 대한 인터넷 이용 통제 완화에 대한 촉구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Analytic View

### ◆ 중국의 인터넷 검열 강화, 인터넷 보급 확산 따라 중단기적 강화 전망

- 중국 정부의 검열 강화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확대에 따른 무제한 정보의 확산에 따른 국가적 정서 위협과 위험을 지키고, 자국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중국의 인권 문제는 구글 사건을 계기로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정부가 인터넷 검열 및 규제, 법률을 강화하고 있어 세계 인권단체들의 인터넷 검열 폐지 요구가 재차 고조되고 있음
- 중국 내부에서도 네티즌들의 권리 주장과 비난이 일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언론 보도 통제 및 사이트 차단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향후 인터넷 확산에 따른 중국 정부의 대응은 중단기적으로는 이전보다 강화된 검열 및 규제 조치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유해 사이트 검열과 더불어 사이버 범죄 차단을 주장하는 중국 정부가 해적판 소프트웨어 적발도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되고 있음
- 이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부분이나,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정치적 논란과 해외 기업들과의 충돌로 인해 이러한 사안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참고자료

1. China targets 'foreign forces' in Web crackdown, AP, 2010.05.03
2. Latest China Web Crackdown Targets 'Hostile' Overseas Forces, TechNewsWorld, 2010.05.03
3. Google, China Battle over Hong Kong, CBS News, 2010.03.23
4. Google's tough call on China, Financial Times, 2010.03.24
5. Google says China services partially blocked, Financial Times, 2010.03.30
6. CNNIC(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홈페이지, [www.cnnic.cn](http://www.cnnic.cn)
7. Opennet.net 홈페이지, <http://opennet.net/country/china>